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회의자료

일 시	2016년 3월 21일 오전 10시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초청인	강우일, 김영주, 도 법, 이선종 인명진, 이윤배, 이신호, 권태선 이부영, 정현백, 지은희, 최병모

회의 순서

1부. 사전 회의 (오전 10시 - 10시 50분)

- 안건
 - 사업계획(안) 검토
 - 호소문 검토
- 참여자 본인 명의의 평화 메시지 작성

2부. 본 회의 (오전 11시 - 12시)

회의의장 :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진행순서
 - 개회인사
 - 경과보고
 - 초청인 인사
 - 특별발언
 - 각계인사 평화 메시지 발표
 - 2016년 평화사업 계획 채택
 - 평화메시지 피켓 퍼포먼스
 - 특별호소문 발표
 - 질의응답

자료 목차

I. 한반도평화회의 활동방향과 계획(안) 3쪽

1. 성격과 목표
2. 활동 원칙
3. 활동 방향
4. 주요 활동 계획안 (2016-2017)
5. 운영체계

II.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7쪽

-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I. 한반도평화회의의 활동방향과 계획(안)

1. 성격과 목표

○ 성격

- 한반도평화회의는 종교계와 각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한시적인 협력기구이다.

○ 목표

- 한반도평화회의는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평화에 관한 권리와 연결된 통일·외교·국방 분야 정책 결정/집행과정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고, 날로 확대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대결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동북아시아의 상생과 협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활동 원칙

○ 무력사용 배제와 평화적 해법 추구

- 한반도평화회의는 전쟁이나 기타 무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한다.

○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 한반도평화회의는 국가의 통일·외교·국방 정책, 기타 평화에 관한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참여와 개입을 촉진한다.

○ 국경, 인종, 종교, 사상을 초월한 연대

- 한반도평화회의는 국가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고 의도적으로 국내

외의 특정세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공권력 남용과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정략적 목적으로 체제와 이념 대결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경, 인종, 종교, 사상을 초월해 (역사)정의와 평화, 생명과 인간안보를 위해 연대한다.

3. 활동 방향

○ 무력 충돌 예방과 긴장 완화 우선

- 2016년 들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무력 충돌 위기를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활동한다.

○ 인도지원과 민간교류협력 지속 추구

-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가 보장되도록 하고, 개성공단 역시 어떤 정세에도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던 2013년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라 조속히 재개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다.

○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평화대안 제시

- 남북 당국과 주변국간의 대결과 적대, 불신과 무시, 도발과 보복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핵위협 제거와 평화체제, 동북아시아 다자간 협력안보 질서의 형성을 동시적이고 포괄적으로 달성할 시민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정부당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 다양한 시민행동 촉진과 협력네트워크 형성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리도록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행동을 지지하고, 촉진하며, 연대한다.

4. 주요 활동 계획안 (2016-2017)

① 긴급행동: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급 행동

- 입장발표: 호소문(3.21), 주요 계기별 회의소집 및 입장 발표
- 면담 : 정책결정자, 외교사절, 각계 인사 등
- 한반도평화회의 구성원의 기고와 강연
- 시민평화캠페인
- 총선 등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적극 제안하도록 독려 및 촉구

② 정책제안: 한반도 평화 보고서 등

- 기존 대북 및 외교정책의 비현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사회의 새로운 접근법을 담은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는 노력 전개
-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비핵화를 실현할 포괄적 해법 모색, 나아가 공존과 협력을 국가운영과 대외관계의 기초로 하는 국가전략 제시
- 2016년 한반도평화시민보고서(가칭 “한반도 평화-대화를 통한 포괄적 해법”) 발표와 함께 관련된 정책대화 추진
- 2017년 시민보고서 발표 및 관련된 정책대화 추진

③ 국제협력: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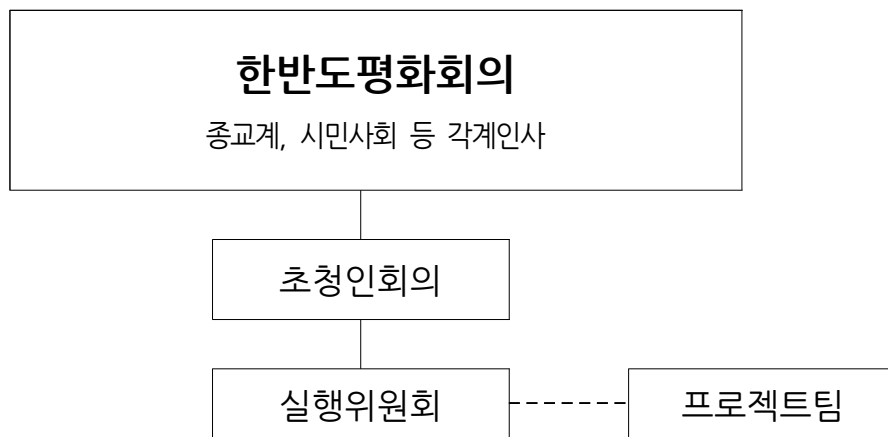
-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개최: 한·미·일·중·러·EU 정치인과 시민사회의 평화대화, 1.5트랙의 다자간 평화네트워크로 정착
- WCD(Women Cross DMZ),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일명, 민간 6자+1 회담, 6자회담 관련국 사회단체+몽골 사회단체간 한반도평화 연례대화), 동아시아국제평화회의 등의 민간평화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 주한외교사절, 외신, 해외 정책결정자와 시민사회를 위한 이슈브리핑
- 시민평화외교 사절단 파견

④ 시민네트워크: 시민 평화역량 강화와 행동전략 모색을 위한 대화

- 가칭 <전환을 위한 시민 평화대화-평화가 밥 먹여준다> 연속 추진

- 불안정한 분단정전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정치군사적 갈등을 공존과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갈 시민의 비전, 주체, 행동전략 마련을 위한 연속대화
- 국가안보를 내세운 시민권 제약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시민감시 활동
- 전통적인 평화·군축·통일 운동단체나 안보전문가 외에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탈핵, 탈군사화, 생명, 여성, 청년, 복지, 노동, 종교, 역사정의, 권력감시·인권, 국제협력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행동하는 시민 주체들과의 실천적 대화

5. 운영체제



II.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와 사드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격 폐쇄 등에 이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와 한미일 독자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전략핵무기를 총동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핵 선제공격 교리를 담은 이 훈련에 맞서 북한 역시 핵무기 실전 배치와 선제 ‘서울해방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말하고자 나섰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정부 주도만으로 맡겨두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유엔의 대북제제조차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도외시한 채 오직 강경한 대북 봉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족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먼저 긴급한 한반도 평화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즉각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핵능력 증대활동에 반대합니다.

핵무기는 비인도적 무기이며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시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모든 군사계획 역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주를 군사화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사일 군비경쟁에 반대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 기술 혹은 요격기술로 이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제재 일변도의 대응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는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제재의 목적에 한정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포괄적 봉쇄는 그 나라 주민들의 생존권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제재가 오히려 권위주의 권력의 기반만 강화시켰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그간의 제재는 그다지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압박과 봉쇄에 치중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났고 장거리 로켓의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체제붕괴 같은 주관적 기대를 품거나 혹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자극적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거나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 등을 공공연하게 연습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정치공세와 대규모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포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도리어 주변국과의 갈등만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여 북한과의 핵 선제공격 배제(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무력시위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 북한의 핵 무장론에 빌미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북한 핵-로켓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남북 간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과 북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나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할 해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서는 안됩니다. 제재가 북한주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재국면일수록 인도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1.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로 하는 군사·정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주변국의 정책이 북한체제의 직접적인 붕괴를 추구할 경우 상대는 협상이나 대화보다 오히려 핵무장 등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서해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은 핵 투발수단을 앞세운 군사적 점령, 북한 지도부에 대한 타격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주의를 증폭시키는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대북 봉쇄와 제재는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핵무장의 변명거리만 제공해왔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하는 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성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 주장도,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도 모두 한반도 위기 해소에는 관심이 없는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과제로 하는 협상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능력의 상호동결이 먼저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정세에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던 2013년의 남북간 합의를 철썩 같이 믿었던 이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6.15선언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무력 충

돌을 예방하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완화할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정부는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로켓 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남한이 미-중, 미-러 간의 전략무기 경쟁의 전장이 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나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위기가 가파르게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위해 대화할 적기입니다. 제재와 봉쇄를 넘어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지금 바로 ‘평화’를 얘기합시다!”

2016. 3. 2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초청인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전 여성부장관),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정현백(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족**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종교** 강해윤(원불교 교무), 김광준(성공회 신부), 김태현(한국종교인평화회의 목사),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핵집(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노정선(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송경용(성공회 신부), 유원규(한빛교회 담임목사), 이성구(조계종화쟁위원회 위원), 전준호(대한불교청년회장), 정인성(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여성**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여

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안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이명혜(한국YWCA연합회장),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대북지원**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권근술(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나동규(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박창일(평화3000 운영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법조** 백승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오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부회장),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장유식(변호사) **학계** 박순성(동국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김창수(코리아연구원장), 서보혁(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시민** 김재명(프레시안 기획위원),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김희선(통일맞이 이사), 류종열(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공동대표), 백선기(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은희만(고양평화누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최열(환경재단 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집행위원장)(이상 63인)